

제3차 해외 전문가 통일교육원 초빙교수 강의안

---

# 미중관계와 한반도의 미래

---

2013년 11월

통일부로고 **통 일 부**  
**통일교육원**

## 이채진 교수 인적사항

지역	이름(나이)	주요 경력
미 국	 <p>이채진 (77세)</p>	<p>(경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Claremont McKenna College 국제정치학 명예교수(현)</li> <li>o Claremont McKenna College 국제정치학 석좌교수(89~11)</li> <li>o California State University 사회과학대학장(86~89)</li> <li>o University of Kansas 문리과대 부학장(82~86)</li> <li>o University of Kansas 동아시아연구소장(76~82)</li> <li>o Claremont McKenna College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소장(89~09)</li> </ul> <p>(학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UCLA 정치학 석사(62)·박사(66)</li> <li>o 서울대 정치학과 학사(59)</li> </ul> <p>(전문분야) 미국의 외교정책, 동아시아 정책(한국, 중국, 일본), 한반도 통일문제</p> <p>(통일 및 한반도문제 관련 저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A Troubled Peace: U.S. Policy and Two Koreas</li> <li>o U.S Policy toward Japan and Korea</li> <li>o China and Korea</li> <li>o The Prospects for Korean Reunification</li> <li>o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Major Powers</li> <li>o Patterns of Inter-Korean Relations</li> <li>o Political Leadership in Korea</li> </ul> <p>(통일 및 한반도문제 관련 강의 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한국 유명대학 및 관련 연구소에서 강의(수십회)</li> <li>o 미국내 평통, 한인회 등에서 강의(수십회)</li> <li>o 한국의 지도자 학자들과 강연 및 토론(수십회)</li> </ul> <p>(초빙기간) 2013.11.14~11.30(17일)</p>

## 머리말

미국과 중국은 6.25전쟁 중 한반도에서 숙명적인 무력 충돌로 엄청난 희생을 감수했다. 중국은 멸망 직전의 북한을 구원하고 한국과는 적대적 관계를 시작했다. 미국과 중국은 휴전협상을 주도하여 한반도의 분단에 일정한 책임을 지게 되었다. 전쟁이 끝난 후 미국은 중국과 북한에 대하여 군사적 봉쇄, 외교적 고립, 경제적 제재를 기반으로 한 적대정책을 실시했으며 한국과는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였다. 중국도 소련과 함께 북한과의 상호방위조약을 맺어 한반도에는 동맹 대 동맹이라는 냉전구도가 정착되었다.

1972년 닉슨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미중관계의 정상화가 시작되면서 한반도의 적대적 동맹구조에도 중요한 변화를 초래했다. 1980년대 말 세계적인 냉전이 종식되자 중국은 한국과 국교를 정상화하여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확대시켰다. 중국은 덩샤오핑이 주도한 개혁·개방정책을 성공적으로 시행하여 미국의 지도력에 도전할 수 있는 역량을 과시하게 되었다. 앞으로 미중관계의 전개과정은 북한의 장래, 남북관계 및 한반도의 통일에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 6.25 전쟁과 미중 대결구도

김일성은 1950년 6월 25일 남침 이전에 이미 박헌영 외상과 함께 북경을 방문하여 마오쩌둥 주석, 조우은라이 총리와 회담을 갖고 전쟁에 관한 중국의 협력을 약속 받았다. 유엔군과 한국군이 인천상륙 이후 서울을 수복하고 38도선을 넘어 평양을 점령하고 압록강까지 진격하자 마오쩌둥은 1950년 10월 중순에 참전을 결정하였다. 중국이 참전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판단된다.

1. 중국은 유엔군과 한국군이 압록강에 접근하자 중국의 접경지역과 동북지역(만주)을 위협할 것이라고 인식했다. 그리고 미국이 중국 본토를 공격할 가능성을 고려하였다.
2. 중국은 멸망에 직면한 북한과 이념과 혁명 동지의식을 가졌으며 국공전쟁 중에 김일성이 중국을 도와준 은혜를 잊지 않았다.
3. 중국은 한반도에서 미국 군사력을 제거하여야 대만도 통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4. 중국은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회복하기를 희망했다.
5. 중국은 역사적으로 한반도에 친근감을 가졌으며, 마오쩌둥은 김일성을 동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김일성의 간곡한 청원을 거절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6. 마오쩌둥은 새로 수립된 중화인민공화국의 장래를 위해서도 스탈린의 파병 요청을 거부할 수 없었고, 중소간 상호방위조약도 중요하게 고려했을 것이다.
7. 마오쩌둥은 만일 중국이 북한의 멸망을 좌시하면 중국 내 반공세력들이 고무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였다.

중국의 참전으로 전세가 완전히 변하자 트루만 대통령은 휴전협상을 제안하였고 미국과 중국은 2년 동안 휴전협상을 주도하였다. 1953년 7월 27일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 평더화이, 조선인민군사령관 김일성이 정전협정에 서명하면서 한반도는 분단되었다. 무력통일의 가능성을 눈 앞에서 놓쳐버린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협상을 완강히 반대했으나 결국 정전협정을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

## 한미동맹 VS 북중동맹

전쟁 이후 미국은 중국과 북한을 군사력으로 봉쇄 (containment)하고 외교적으로 고립(isolation)시키면서 광범위한 경제적 제재조치(sanctions)를

취하는 적대정책을 수립하였다. 미국은 이승만 박사의 휴전협상 반대도 무마하고 동북아에서의 반공봉쇄정책을 한반도에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한국의 영토가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포함하며 전쟁이 발생하면 미국의 자동적인 개입을 명시하고자 주장했으나 미국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에서, “태평양지역에서 현재 통제하고 있거나 앞으로 합법적으로 행정적 통제 하에 놓일 영토에서 어느 한 국가에 무력공격이 있을 경우 다른 국가는 그의 안전과 평화에 위협하다고 인정하고 헌법의 절차에 따라 공동의 위협에 대항하는 행동을 취한다”고 선언했다.

1961년 북한은 중국 및 소련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였다. 중국과 맺은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의 제2조는, “만일 체약 일방이 다른 국가나 국가들의 연합에 의해서 무력침공을 당하여 전쟁상태에 놓이게 되면 체약 상대방은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즉각적으로 군사적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북중조약은 한미조약보다 군사지원 약속을 더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으며 헌법절차에 따른다는 부대조건도 없다. 한미조약은 어느 일방이 일년 전에 통고만 하면 자동적으로 폐기되지만 북중조약은 양국이 합의해야 수정이나 폐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1962년 북한과 변경조약을 체결하고 1964년에 상세한 의정서를 마련하였다. 중국은 조우은라이 총리의 지시에 따라 압록강과 두만강에 있는 도서와 천지(天池)의 영유권 분할에 관하여 북한에 대폭적으로 양보하였다. 압록강과 두만강에 관해서는 중국과 북한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관리하며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3개 원칙을 수용하였다. 김일성은 조우은라이의 호의적인 정책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의 흉상을 홍남에 세우기로 결정하였다.

## 닉슨의 방중과 7.4공동성명

철저한 반공투사로 유명한 닉슨대통령은 중국에 대하여 파격적인 유화정책을 실시하여 1972년 중국을 방문하고 조우은라이 총리와 ‘상하이 공동성명’에 서명하였다. 닉슨은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여 (1) 소련의 세력을 견제하고, (2) 월남전쟁을 종결할 수 있으며, (3)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4) 성장일로에 있는 일본도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중국은 미국과 적대관계를 청산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이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 (1) 중국은 소련과의 분쟁을 고민하고 있었기에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소련을 견제할 수 있다.
- (2) 중국은 문화대혁명으로 피해를 본 외교전선을 재정립하고 유엔 가입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
- (3) 중국은 미국을 이용하여 일본 제국주의의 부활을 막고, 월남전쟁을 평화적으로 종결하며, 한반도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 (4) 중국은 미국이 대만과 유지하고 있는 군사적·외교적·경제적 관계를 단절하여 중국의 통일을 촉진할 수 있다.
- (5) 중국은 자본주의의 종주국인 미국을 통하여 서방세계와의 경제 관계를 확대할 수 있다.

닉슨과 조우은라이는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패권을 추구하지 않으며 미중관계의 개선을 위하여 서로 노력한다고 약속하였다.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는 ‘상하이 공동성명’에서 닉슨은 한국의 정책과 입장을 지지하고 중국은 북한의 정책과 입장을 지지하였다. 정상회담이 종료되자마자 조우은라이 총리는 비밀리에 평양에 가서 김일성과 회담을 가졌다. 닉슨은 방중 이전에 회담을 갖자는 박정희 대통령의 요청을 거절했고 방중 이후에는 국무부의 차관보에 불과한 마샬그린을 서울로 보

내어 박대통령을 만나게 했다. 동맹국 외교에 관한 중국과 미국의 차이를 보여주는 일례라고 할 수 있다.

닉슨의 방중 결정에 충격을 받은 박정희와 김일성은 서로 고위급 특사를 교환하여 「7.4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남북은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민족대단결을 도모한다는 ‘조국통일 3대원칙’에 합의했다. 그러나 「7.4공동성명」도 뿌리 깊은 상호불신의 벽을 넘지 못했다.

## 한중 국교 정상화 과정 및 결과

1990년대 초기는 세계적인 냉전체제가 지각변동을 한 시기였다. 동서독이 통일되고, 소련이 붕괴되며, 동구사회주의 국가들이 줄줄이 무너지면서 냉전이 종식되었다. 미국은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부상하여 이라크와의 전쟁에서 국제 연합군을 이끌고 단시일 안에 승리를 이루었다. 일본은 고도 경제성장을 지속하여 미국과 종종 마찰하였고 중국은 천안문 사건 이후 국제적인 고립상태로부터 헤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있었다. 남북한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하였고 남북은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였다.

중국은 드디어 한국과 국교를 정상화하기로 결정했다.

1992년 7월 중국의 첸치천 외교부장은 북한으로 가서 김일성의 사전양해를 얻었다. 1992년 8월 24일 첸치천과 한국의 이상옥 외무부장은 북경에서 만나 ‘국교 정상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은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유엔헌장과 평화공존 5개 원칙에 따라 항구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할 것을 약속했다. 한국은 중국인민공화국을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고 “중국은 하나이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라고 선언하였다. 한국과 중국은 6.25 전쟁으로 야기된 적대관계를 청산하였다. 한국은 대만과의 외교관계를 단절

하였으니 대만은 한국이 배은망덕하다고 성토했다.

중국이 한국과의 수교를 결정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 (1) 1978년 말에 중국의 실권을 장악한 덩샤오핑은 과감한 개혁개방 정책을 채택하고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실용주의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는 미중 국교 정상화를 마무리하고 1979년 미국을 방문하여 카터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 (2) 중국은 성공적인 ‘서울 올림픽’ 이후 대한민국의 북방정책을 높이 평가했으며 한국의 고도 경제성장의 경험을 배우고자 하였다.
- (3) 중국은 한국이 이미 헝가리를 선두로 동구권 국가들 및 러시아와 수교한 전철을 답습하고자 하였다.
- (4) 중국은 남북이 유엔에 가입하고 기본합의서를 채택한 현실을 인정하고 남북관계에서 조정자 혹은 균형자 역할을 추구하였다.
- (5) 한반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과 일본을 견제하고자 했다.
- (6) 중국은 한국과의 수교로 대만을 국제사회에서 더욱 고립시키기를 시도했다.

미국은 한중수교를 지지하고 환영하였다. 1980년대에는 남북의 ‘유엔동시가입’과 ‘교차승인’이 이루어지면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교차승인이란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을 승인하고 미국과 일본은 북한을 승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초에 러시아와 중국은 한국을 승인했지만 미국과 일본은 북한을 승인하지 않아 한반도에는 외교적 불균형 상황이 발생했다.

중국은 한국과 수교한 후 때로는 남북한 등거리 외교를 시도한 경우도 있다. 가장 좋은 사례는 1997년 중국이 황장엽 망명사건을 균형있게



처리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한국의 최고위급 지도자들과의 상호 방문을 통해서 한반도에 관한 정책을 협의하고 조율하려고 노력했다. 중국은 북한 핵문제와 미사일 발사에 관하여 유엔안전보장이사회나 국제원자력기구에서 북한의 입장에 맞지 않게 투표한 경우도 있었으니 북중관계가 늘 순탄한 것은 아니었다.

미국과 중국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한반도 문제에 관하여 토의할 때 타협도 하지만 첨예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2012년 12월 유엔에서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에 대한 결의안을 심의하던 도중에 미국의 라이스 대사가 장거리로켓 발사는 지역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규탄하자 중국의 리바오둥 대사는 지역안전에는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화가 난 라이스가 리바오둥의 발언은 “어리석은 짓” (ridiculous)이라고 했고 리바오둥은 “어리석다고요? 말조심하십시오”라고 경고했다. 또 다시 라이스는 “어리석다는 단어는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나와 있다”고 빈정거렸다. 이 설전은 미국과 중국의 외교관들이 한반도문제에 관하여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중국과 한국은 수교 이후 경제협력관계를 착실히 촉진하여 한중무역은 한미무역을 추월하였다. 한중무역은 1992년 수교 당시에 63억 7천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2011년에는 35배인 2,206억 달러로 급상승했다. 중국은 한국무역에서 제1위를 차지했고 한국은 중국의 제3위 교역국이 되었다. 한국 총수출액의 24%가 중국으로 향하고 있다. 만일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 감소하면 한국의 수출은 1.7% 하락하고 한국의 경제성장률도 0.4% 축소가 예상된다. 한국의 중국 의존도는 심각한 수준까지 올라왔으며 한중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되면 한중경제관계는 더욱 긴밀해 질 것이다.

중국은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지속하고 있으며 북한의 무역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은 실로 압도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북중무역은 26억 달러에 불과하고 중국의 무역에서 차지하는 북한의 중요성은 80위 이하로 추락하였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경제제재조치를 선별적으로 하고있다. 만일 중국이 북한과의 경제관계를 - 특히 변경무역 - 완전히 단절한다면 북한의 경제는 오랫동안 지탱될 수 없을 것이다.

2003년부터 베이징에서 시작한 6자회담에서 중국은 의장자격으로 회담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9.19 공동성명」 작성 과정에서도 미국과 북한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조율하였다. 중국과 북한은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기를 바라고 있으나 미국과 한국은 선결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6자회담 재개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관하여 미국과 중국은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미국은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발표를 전적으로 동의하고, 한국의 '5.24 조치'를 지지하며, 북한의 도발적인 행위를 규탄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방위약속을 재확인하고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를 한국에 급파하며, 한미군사연습을 실시하여 대북 응징력을 과시하였다. 클린턴 국무부 장관과 게이츠 국방부 장관은 한국의 유 외무부 장관과 김 국방부 장관과 함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방문했고 샤프 유엔군사령관은 연평도를 시찰하였다. 미국과 한국은 유엔에서 북한의 만행을 비판하는 외교적 노력을 시도했다.

이에 대해 중국의 입장과 태도는 다음과 같다.

- (1) 중국은 모든 당사국들에게 자제해 줄 것을 권고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했다.

- (2) 중국은 합동수사에 참여하기를 사양했고 합수부의 결론에 수용하기를 거부했다.
- (3) 중국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것을 견제했다
- (4) 중국은 '조지 워싱턴호'의 서해 진입을 반대하고 한미합동군사연습을 비난하며 자국의 방위태세를 강화했다.
- (5) 중국의 지도자들(후진타오 주석, 원자바오 총리, 양제츠 외교부장관 등)은 미국과 한국의 지도자들과 만나 협의했으나 애매모호한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6) 결과적으로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간접적으로나마 북한의 입장을 비호한 셈이 되었지만 아마도 북한과의 비공개 접촉과 막후교섭을 통하여 더 이상 무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권고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 중국의 경제발전과 정치안정

미중관계의 전망은 두 개의 중요한 문제 - ① 중국이 얼마나 오랫동안 고도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까 ② 중국이 과연 정치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까 - 와 직결되어 있다. 중국은 신5개년 계획(2011~2015)에서 국민총생산의 연평균 성장률을 7%로 하향 조정하여 양적인 성장 위주정책을 지양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이라고 선언했다. 중국이 5년 동안 7% 정도의 경제성장을 실천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고도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일단 회의적으로 판단된다.

- (1) 중국 국민총생산의 30-40%를 차지하는 광대한 국영기업들의 일부는 효율성이 떨어지지만 당장 구조조정을 하거나 현실적으로 사유화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점차 중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노동생산성이 증가하지 못한 사실도 지적할 수 있다.

- (2) 중국은 장기적인 고도성장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자원의 충분한 확보 △노동임금의 가파른 인상문제 해결 △내수 진작을 중시해야 하는 등의 난관에 부딪힐 것이다 . 중국은 사회보장제도가 취약하고 국민들이 교육과 주택에 집착하여 높은 저축률은 국내소비를 억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 (3) 중국은 고도성장에 따르는 제반 문제들(국가와 시장 사이의 긴장, 도시와 농촌의 괴리, 빈부격차의 증가, 지역발전의 불균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립, 부정부패의 만연, 유동노동인구의 불안정성, 환경오염의 확산, 국민 소요사건의 증가)을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경제가 발전할수록 분쟁이 더욱 복잡하고 심각해질 것이다.
- (4) 중국은 장기적 고도 경제성장을 위해 국내적으로는 유능하고 현명한 지도력을 발휘하고 대외적으로는 평화롭고 협조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한 요인이지만 이 모두가 불투명하고 예측 불허한 상황이다.

중국 공산당 정권이 주권재민의 원칙에 근거한 정치적 정당성을 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당지배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고도의 경제성장 실현, 국가 공권력 강화, 자유민주주의 사상의 억제, 언론집회의 자유 제약 등의 방법과 수단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중국 지도자들은 1989년에 발생한 천안문사건이 재발하지 않을까 극도로 예민해 있다.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무부의 중국담당 부차관보였던 셔크(Susan Shirk)는 중국 지도자들이 항상 정치적인 불안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부시 대통령 정부에서 중국담당 부차관보였던 크리스텐슨(Thomas Christensen)은 중국의 특성을 “자신있는 불안감”(confident insecurity)이라는 이율배반적인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중

국 지도자들은 대외정책에서는 자신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국내정치에서는 불안감에 쌓여있다는 뜻이다. 특히 그들은 인터넷, 이메일, 휴대전화 등을 통한 여론의 향배에 지극히 예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49년에 수립된 중국공산당 정권은 64년이 넘어 집권정당으로서의 경륜과 실력을 쌓아온 반면, 거대하고 복잡한 관료집단으로 변하여 평등하고 정의로운 공산사회를 구현하겠다는 목표(초심)은 사라지고 말았다. 인간이 경제적으로 다소 풍요로워지면 자유와 인권을 갈망하는 것은 보편적인 경향이고 독재정권 하에서도 시민사회가 대두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으로 중국도 예외일 수는 없을 것이다. 중국공산당 정권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향한 인민의 욕구를 충족할 것인지, 다양한 시민사회의 이익과 압력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그리고 인터넷·휴대전화·이메일 등 중국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언론의 자유와 민족주의의 확산에 어떻게 대응할 지에 따라 정치적 안정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만일 중국이 정치적으로 불안정해지거나 경제성장이 둔화되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저하될 것이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 미중 정상회담과 한중 정상회담

미국과 중국의 최고 지도자들은 한반도에서 평화를 정착시키고 북한의 핵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긴밀한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 특히 2011년 1월 오바마 대통령은 후진타오 주석을 국빈으로 초청하여 우호적이고 심도있는 정상회담을 가졌다. 1월 19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양 정상은 상호존중과 상호이익에 근거한 “협력적 동반자”(cooperative partnership) 관계를 약속했다. 오바마는 강력하고 부유하며 성공적인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더욱 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환영하며 후진타오는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국가로서 아시아지역의 평화·안정·번영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선언했다. 양 정상은 21세기에 보다 안

정되고 평화로우며 번영한 아태지역 구축을 위하여 함께 노력할 것임을 다짐했다.

한반도에 관하여 오바마와 후진타오는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미국과 중국은 2005년 9월 19일 [6자회담] 공동성명과 이와 관련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이 확인한 바와 같이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양국은 최근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시한다. 양국은 한반도 문제에 관하여 긴밀히 협력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는 점을 인정한다. 미국과 중국은 남북한 관계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성실하고 건설적인 남북대화가 기본적인 단계임에 동의한다. 미국과 중국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반도의 비핵화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절차가 중요하며, 6자회담의 2005년 9월 19일 공동성명에서 명시한 약속을 완전히 이행할 필요성을 재확인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과 중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선포한 우라늄 농축계획에 우려를 표한다. 양국은 2005년 9.19 공동성명과 이와 관련된 국제적 의무와 약속에 위배되는 모든 행동을 반대한다. 양국은 상기한 여러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하여 6자회담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다.”

오바마와 후진타오가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의 긴장완화, 한반도의 비핵화, 남북관계 개선, 6자회담 재개, 그리고 북한의 우라늄 농축계획에 관한 합의사항을 공개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2013년 6월 6-7일 오바마 대통령은 후진타오의 후계자인 시진핑 주석을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란초미라지 휴양지에 초청하여 비공식적인 정상회담을 가졌으나 공동성명이나 공동기자회견은 하지 않았다. 6월 27일 시진핑 주석은

박근혜 대통령을 베이징으로 초청하여 “한중미래비전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정상은 9월 초순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Saint Petersburg)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만난 다음 10월 7일 APEC 정상회담이 열린 발리에서 또 다시 정상회담을 가졌다. 그리고 박대통령은 브루나이에서 리커창 총리와의 만났다. 여러 가지 보도와 논평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1) 시진핑은 오바마와 만나 오바마-후진타오 공동성명을 재확인하고 강대국 간의 관계에 관한 새로운 모델을 함께 펼쳐가기로 합의했다.
- (2) 후진타오에 비하여 시진핑은 더 자신감을 갖고 국제문제에 관하여 전향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보였다.
- (3) 시진핑은 북한의 비핵화에 강한 의지를 표시했고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표시했다.
- (4) 시진핑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강경노선을 완화하고 무력도발을 중지하기 위하여 설득과 압력을 행사할 의지를 보였다.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 (5) 정상회담을 통하여 미국, 중국, 한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재발을 방지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며, 남북관계의 개선을 장려하고, 비핵화 지대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 (6) 2013년 7월 27일 평양에서 열린 정전협정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중국의 리유안차오 부주석은 김정은 제1위원장과 만나 시진핑-오바마 회담과 시진핑-박근혜 회담의 내용을 설명하고 김정은의 이해와 협조를 단호하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으로 중국이 미국 및 한국과 합의한 바와 같이 얼마나 성실하고 강경하게 북한을 설득할 수 있을지 그리고 과연 북한이 중국의 설득과 압력을 수용할 지는 숙제로 남아 있다.

## 미중관계의 전망과 한반도의 미래

미중관계의 전망에 관해서는 미국과 중국 안에 통일된 의견은 없고 상이한 입장과 논쟁만이 난무하고 있다. 한 연구보고서(Strategic Asia)에 의하면 중국의 국민총생산은 2030년에 29조 달러로 성장하여 미국(21조달러)을 추월하여 세계 제1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카이텔(Albert Keidel) 박사는 중국의 경제력이 늦어도 2035년에는 미국을 압도하여 세계질서를 중국이 원하는 대로 재편할 것이며 미국은 제2등 국가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코노미 박사 (Elizabeth Economy)는 중국은 고도 경제성장의 결과로 이미 “혁명적인 권력”이 되었으며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세계질서를 수정하려고 할 것이다. 미어샤이머(John Mearsheimer) 교수는 공격적인 현실주의 이론에 입각하여 미중대결은 불가피하며 미국은 중국과의 신냉전 시대에 대비하고 중국에 대한 신고립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이(Joseph Nye) 교수는 설사 중국의 국민총생산이 미국을 추월하더라도 미국의 전략적인 우월성은 오랫동안 유지될 것이므로 중국이 미국에 도전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키신저(Henry Kissinger) 박사는 미중 충돌이 필연적이라는 논리를 거부하고 미중협력 가능성을 역설한다. 오바마-후진타오 공동성명도 미중 간의 대립보다는 협력을 통하여 상호간의 국가이익을 확대할 수 있고 세계의 평화·안정·번영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공통된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중국내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로 유명한 류밍푸 중국 국방대학 교수는 그의 저서 「중국의 꿈」(2010)에서 중국은 머지 않아 미국을 압도하고 세계에서 1등 국가가 되어 중국의 역사적인 위대함을 회복할 것이라고 설파했다. 그는 중국이 평화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박하고 중국의 경제 성장과 군사적 성장을 토대로, 불합리한 세계질서를 중국



식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베이징대학교 국제대학원의 왕지스 원장은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려는 아무런 계획이 없으며 세계에서 중국과 미국이 협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리자오싱 전 외교부장은 중국이 제2의 대국으로 미국과 양대 강대국(G2)이 되었다고 거만하게 구는 것은 바보의 짓에 불과하다고 경고하였다.

만일 앞으로 카이텔 박사와 류밍푸 교수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미중관계가 대립과 항쟁의 방향으로 전개된다면 남북관계와 통일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 지역의 분쟁(중국과대만, 다오유타이/센카쿠섬, 남중국해의 영토문제)에 무력을 사용하여 직접 개입하게 되면 6.25전쟁과 비슷한 대결상황이 반복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한 미군기지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나마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지역분쟁을 틈타 모종의 도발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일 미중관계가 키신저 박사와 왕지스 교수가 지적하듯이 상호협력과 상부상조하는 원칙을 따르면 오바마-후진타오 공동성명, 오바마-시진핑 정상회담, 박근혜-시진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남북관계개선과 평화통일과정에 긍정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미중관계의 전개과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한국 정부에 정책적 건의를 한다.

- (1)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등거리외교나 중립정책을 시도하는 것은 금물이다. 한국은 국가이익을 위하여 미국과의 동맹을 최상위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중국과는 선린협력관계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 (2) 한국은 미중관계의 복잡한 전개과정 속에서 조정자 역할을 자초

할 필요는 없다. 미국과 중국에 비하여 한국의 국력과 외교역량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의 조정역할도 큰 실효성이 없을 것이고 오히려 한국이 말려들어 갈 수도 있다.

- (3) 만일 6자회담이 재개되면 한국은 미국 및 중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실사구시의 견지에서 북한이 비핵화에 관한 공허한 약속보다 9.19 공동성명에서 적시한 구체적인 행동을 보이도록 확실히 다짐시켜야 할 것이다.
- (4) 한국은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미사일방어체제, 환태평양경제 동반자협정 등 민감한 문제들에 관하여 미국과 중국의 의도와 입장을 면밀히 고려하여 장기적인 국가이익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 (5) 한국은 중국이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약속하는 것을 모두 액면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될 것이다. 중국의 외교역사에서 표리 부동한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 (6) 한국으로서는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고, 다변화 정책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 (7) 한국은 중국과 마찰할 수 있는 문제들(서해상의 어업활동, 탈북자 북송, 동북공정과 고구려의 역사적 성격, 이어도의 법적지위 등)을 슬기롭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 (8) 한국은 중국과 반일 연대를 형성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일본과 미국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일본 정부가 태도를 변하면 한국이 협력할 수 있는 문호는 열어 놓아야 한다.
- (9) 중국 안에 있는 일부 의식자들이 중국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고 중국은 “중조조약”을 폐기하고, 경제 원조를 중단하며, 봉건적 3대세습을 반대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중국은 북한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중국인들의 태도변화와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논쟁에 한국은 조심

스럽게 유의할 필요가 있다.

- (10) 역사적으로 한반도는 열강의 대립과 각축으로 희생된 바도 있으니 한국은 대내적인 단결을 도모하고 자존의식을 고취하여 장기적으로 있을 수 있는 강대국 간의 외교적 흥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